

# 한눈에 보는 윤석열정부 1년

외교  
안보

## “무너진 국익, 불안한 한반도”

### 외교안보 리스크 1호 윤석열대통령 철학 없는 아마추어 지도자의 국격 훼손

- 미국에 대놓고 욕설한 **초유의 대통령** (2022.9월 방미)  
국가망신에 뻔뻔한 거짓말 일관, 가짜뉴스라는 적반하장 대통령실  
-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냐?”  
※ “한국 대통령이 미국 의원들을 향해 ‘바보들’이라 모욕” (WP, 2022.9.22)  
- 욕설파문으로 윤석열 국정지지율 24%, 역대 최저치 폭락
- 이란-UAE를 뜯금없이 싸움불인 **무지한 대통령** (2023.1월 UAE 순방)  
서툴고 위험한 외교망언, 국제관계 이해 전혀 없는 아무말 안보  
- “UAE의 적은 이란, UAE는 우리 형제국가, 형제국의 적은 우리의 적”  
※ “한국 대통령 발언은 ... 그가 전적으로 무지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란 외무부, 2023.1.16)
- 중국·러시아를 적대국으로 내몬 **갈라치기 대통령** (로이터, 2023.4.19)  
- “(대만해협에서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절대 반대”  
-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재정적 지원만 고집하기는 어려워”
- 한글을 부끄러워한 **사대주의·자기비하 대통령** (2022.6월 여당 오찬)  
- “내셔널메모리얼파크라 하면 멋있는데, 국립추모공원은 멋이 없다”

#### 윤석열대통령 외교안보 리스크에 대한 국민 평가

대통령 욕설파문 사과

필요하다  
70.8%

자료 : 조원씨앤아이, 2022.9월

대통령 욕설 진위 여부

‘바이든’  
61.2%

자료 : 넥스트위크리서치, 2022.9월

대통령 대만해협 변경 반대

우려된다  
67.6%

자료 : 데이터리서치, 2023.4월

대통령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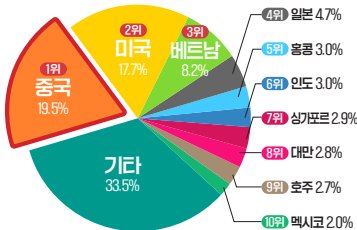
우려된다  
66%

자료 : 데이터리서치, 2023.4월

# 진영편중 외교안보노선, 강대국 패권경쟁에서 한국만 푸대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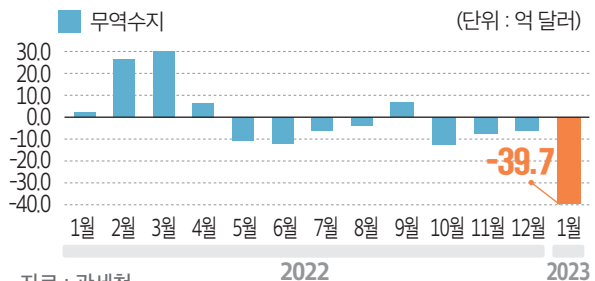
- 윤석열정부 **신냉전** 편향외교, 진영외교  
vs 문재인정부 **국익중심** 실용외교, 균형외교
  - 미↔중·러간 지정학적 충돌에 매몰, 진퇴양난에 빠진 한국
  - 미국정부의 중국포위에 휩쓸린 윤석열정부, 전형적 **‘약소국 콤플렉스’**
  - 우크라이나 무기제공 시사, ‘전쟁개입’ 해석으로 한↔러 갈등 고조  
※ 윤석열정부가 미국에 대여한 포탄 33만발, 우크라이나 지원 가능성 농후
- 反중·러 기조 **경제안보 실패**로 우리 국익만 훼손
  - 중국은 한국의 제1교역국 (2023년 19.5%, 2위 미국 17.7%)  
2023.1월 **대중 무역적자 -40억 달러**, 최대적자국 전환된 중국  
※ 문재인정부 시기 수출액 비중 27~25% → **윤석열정부 들어 23~19%**
  - 러시아 진출 151개 한국기업 경제적 타격 불가피, 수출입 악영향
  - 문재인정부 때 **선진국 격상**된 대한민국 경제적 위치 중대한 손상
- **국익전무 한미정상회담**(2023.4월), 미국이 무시한 윤석열 친미외교
  - 진전없는 핵억지, 정부·여당은 “핵공유” 자화자찬하나 미국은 부인
  - 美 인플레이션감축법(IRA)·반도체지원법 차별규제 해소 실패
  - 미국 도청에 말 한마디 못한 굴욕, **대등한 주권국·동맹국 위상 포기**

한국의 교역국 비중 (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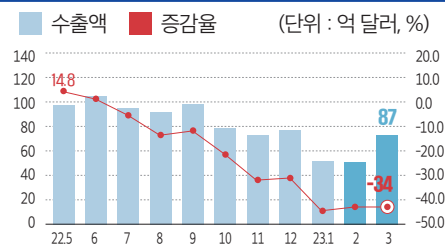
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윤석열정부 대중국 무역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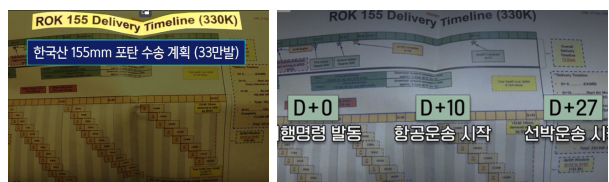
자료 : 관세청

반도체 월별 수출액 추이



자료 : 관세청

윤석열정부의 포탄 33만발 우크라 지원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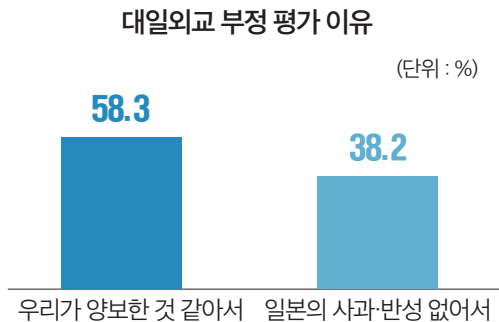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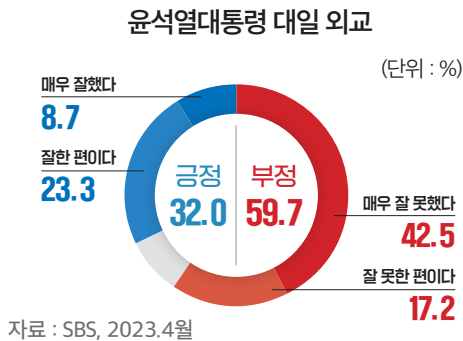


자료 : 뉴욕타임스, 2023.4.8

# 대일 굴욕외교, 매국외교, 빈손외교 최악의 외교참사, 대한민국 포기 외교

- 우리 돈으로 일본 짓값 대신 갚겠다는 ‘일본 강제동원 제3자 변제’
  - ① **주권포기** 3·1운동과 임시정부 법통 계승한 헌법 부정
  - ② **국민포기** 피해자인 국민 외면하고 일본 전범기업에 면죄부
  - ③ **법치포기** 대법원 확정판결 무시하고 식민지배 인정 셀프보상
- 국민이 반대하는 강제동원 해법으로 성사된 한일정상회담,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일본에 모든 것을 내어준 **굴욕적 빈손투항**
  - ① ‘일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흥정거리로 삼은 **역사모독 정부**  
※尹대통령 외신 망언 “100년 전 일로 무릎 꿇으라는 건 못 받아들여” (WP, 2023.4.24)
  - ② 일본 수출규제 WTO 제소, 지소미아 정상화 등 외교적 지렛대를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헌납한 **외교무능 정부**
  - ③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침묵, 생명·안전 포기한 **국민모독 정부**

## 윤석열정부 대일외교에 대한 국민 평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 제3자 변제 방안, 한일 관계와 국익 위해 찬성	35	59	정부 방안, 일본의 사과와 배상 없어 반대
만약 일본 가해 기업이 미래세대 대상 기부한다면 배상한 것으로 보겠다	27	64	미래세대 대상 기부, 배상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한일 관계, 우리가 일부 양보하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개선해야 한다.	31	64	한일 관계, 일본의 태도 변화 없다면 서둘러 개선할 필요 없다
현재 일본 정부, 식민 지배 등 과거사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8	85	현재 일본 정부, 과거사 반성하지 않는다





자료: 한국갤럽, 2023.3월

## 친일 군사외교, 한미일 군사동맹 위험 표출

- 육일기 건 일본 해상자위대와 독도 인근 훈련 (2022.9~10월)
  - 독도영유권 주장하는 일본과의 영토분쟁 문제 무시
  - 일본 헌법에도 없는 일본의 정식군대를 인정한 꼴
- 일본 자위대의 **유사시 한반도 진입** 가능성 가시화
  - 자위대가 2015.9월 정비된 「중요영향사태법」 범위 확대 적용, 집단자위권 행사하면 유사시 한국 또는 북한 영역 진입 가능  
※ 자국에 대한 직접공격이 없어도 ‘존립위기사태’ 적용시 무력행사 가능
  - 2022.12월 일본 국가안보전략에 **적기지공격능력** 최초 명시, 일본의 방어중심 안보정책이 ‘공격가능’으로 바뀐 역사적 전환
- 한미일 군사동맹화 추진, 일본 군사대국화 용인하는 냉전적 행보
  - 한국을 미중갈등, 신냉전의 한가운데로 몰아넣은 윤석열정부
- 한미일 ‘파이브아이즈’ 추진, 중국 경제보복(제2의 사드) 우려  
※ Five Eyes :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5개국 군사기밀 정보동맹

### 일본 국가안보정책 대전환 핵심내용

#### 주변국가 인식

 <b>북한</b> 종전보다 한층 중대하고 압박한 위협	 <b>중국</b>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	 <b>한국</b> 매우 중요한 이웃	 <b>미국</b> 역사적 결정 환경, 전폭 지지
-------------------------------------------------------------------------------------------------------------------------	-------------------------------------------------------------------------------------------------------------------------	---------------------------------------------------------------------------------------------------------------	------------------------------------------------------------------------------------------------------------------------

#### 안보정책 변화

- 전후 처음으로 ‘적기지공격능력’(반격 능력) 보유 명시
- 방위비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에서 2027년까지 2%로 증액
- 일-미 동맹의 억제력·대처력 한층 강화
- 유사사태(전쟁)를 염두에 두고 대응 능력 강화**

#### 도입예정 공격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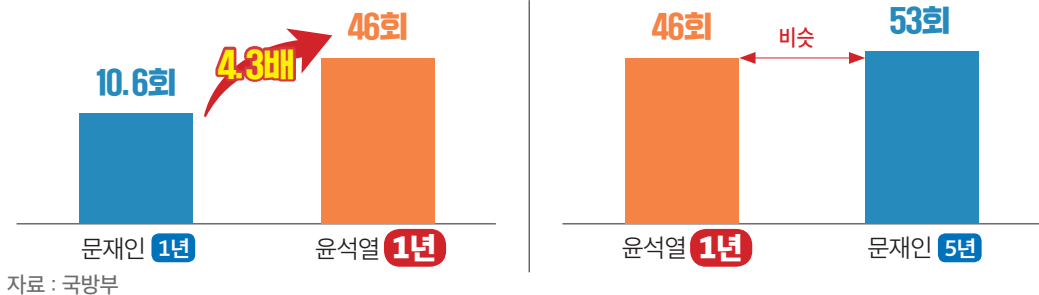
- 사거리 1250km 이상 미국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구매해 조기 배치
- 일본 자위대 ‘12식 지대함 유도탄’ 사거리 200km에서 1000km 이상 개량해 2026년 지상 배치(2028년 합정, 2030년 전투기)
- 도서방위용 고속 활공탄 2026년 배치
- 마하 5 이상 속도의 극초음속 유도탄 2030년 배치

자료 : 일본 국가안보전략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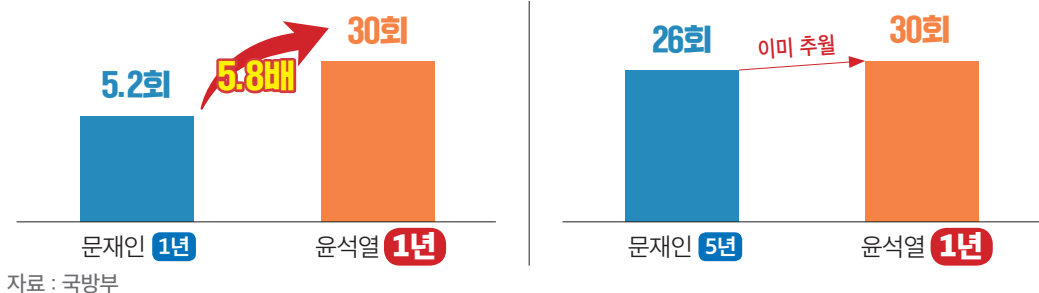
# 사라진 평화, 출구 없는 한반도 안보불안

- 윤석열정부 1년 북한 **무력도발 46회**  
: 문재인정부 1년 횡수(10.6회)의 **4.3배**
  - 윤석열정부 1년 무력도발 횡수, 문재인정부 5년 횡수(53회)에 버금가는 수준
  - 2018년 한반도 평화국면부터 보면 문재인정부 4년 반 횡수(42회) 이미 추월
- 윤석열정부 1년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30회**  
: 문재인정부 1년 횡수(5.2회)의 **5.8배**
  - 문재인정부 5년간 탄도미사일 발사 총 26회, 윤석열정부가 이미 추월
- 북한, 핵무력 법제화로 핵무기를 선제공격용으로 사용할 것 선언
  - 2022.9.8일 ‘핵무력법’ 채택, 핵무기 전쟁초기 사용가능 내포

윤석열정부 vs 문재인정부 북한 무력도발 횡수 비교



윤석열정부 vs 문재인정부 탄도미사일 발사 횡수 비교



# 국민불안 키운 안보참사 시리즈, 안보 무능력·무책임 정부

- ❶ 북한 무인기 안보참사, 뺨 뚫린 서울 하늘에 텅빈 대책
  - **탐지실패** 북한 무인기, 대통령실 상공 침투 후 무사 복귀
  - **공유실패** 침투대비태세 ‘두루미’ 사건발생 100분 뒤 발령
  - **대응실패** NSC 패싱 무사안일, 지상 방공무기 무용지물
  - **대책실패** 현실성 없는 드론사령부, 대통령 말 한마디에 급조
- ❷ 미국 도청 안보참사, 하늘에 이어 사무실까지 뚫린 대통령실
  - 몽땅 다 들려준 수준 (우크라이나 무기제공 계획, 포탄수송 일정)
  -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 (대북, 대일외교, 반도체·자동차 전략 등)
  - 미국은 도청 인정, 대통령실은 “악의 정황 없다”는 황당한 해명
  - **명백한 주권침해** 항의·진상규명 아닌 “협의”하는 비굴한 안보
- ❸ 핵무장 주장 안보참사, **한반도 핵전쟁 불사**하겠다는 위험한 발상
  - 한국 스스로 비핵화 명분 상실, 북한 핵보유국 공식 인정 위험
  - 한미동맹 근간 훼손, 미국의 핵억지공약에 대한 불신으로 작용
  - 국제사회 불용, 일본·대만 핵무장 등 동북아 ‘핵도미노’ 위험
  - 전술핵 배치해도 핵심권한 부재 (핵전략 공동설계, 핵발사권 공유)

## 북한 무인기 침투 경로 및 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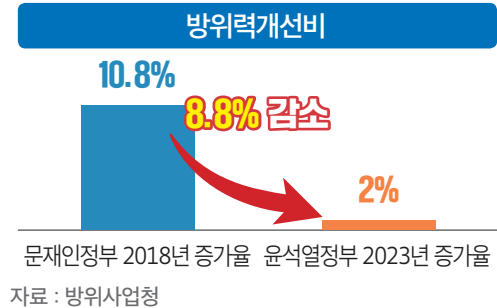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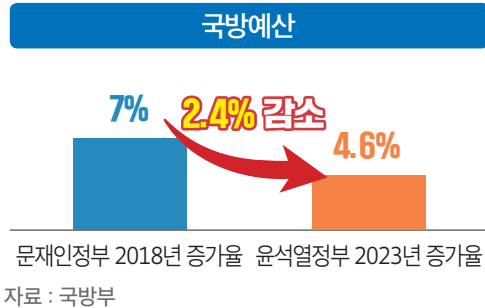
- ▷ 10:19 1군단 포착 → 10:25 北 무인기 판단 → 11:10 지상작전사령부 보고  
→ (공유x) 10:50 수도방위사령부 北 무인기 포착 → 11:20 北 무인기 판단 → 11:27 합참 보고  
→ 판단 지연 → 12:00경, 즉 **100분 뒤 ‘두루미’ 발령**
- ▷ 북한 무인기 포착 후 12:10 국방부장관 보고(**111분 뒤**), 12:12 대통령 보고(**113분 뒤**)
- ▷ 대통령실 상공 침투 사실은 군이 사건발생 후 **8일**, 대통령은 **9일 뒤**에야 파악

자료 : 국회 국방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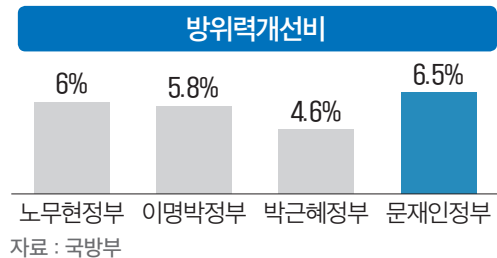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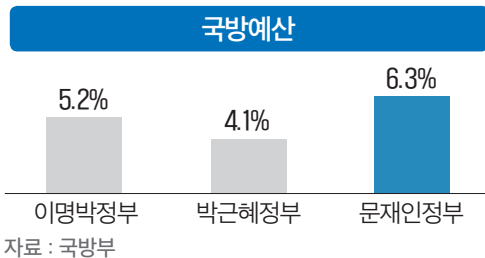
# 말로만 북핵대응, 실제 국방력에는 무관심

- 윤석열정부 첫 국방예산 4.6%, 방위력개선비 2% 증가  
vs 문재인정부 첫 국방예산 7%, 방위력개선비 10.8% 증가  
※ 문재인정부 2018년 증가율(7%), 2009년(8.7%) 이후 9년 만에 최대치
- 문재인정부, 역대 최고 국방예산(6.3%) 및 방위력개선비(6.5%) 증가
- 2023년 국방력 강화 신규사업 70.6%(34개 중 24개) 미반영  
- 윤석열정부가 특히 강조하는 북핵대응 한국형 3축체계 신규사업은 8개 중 7개 미반영

## 윤석열정부 vs 문재인정부 첫해 국방예산 및 방위력개선비 비교



## 문재인정부 국방예산 및 방위력개선비 증가율



## 윤석열정부 2023년 북핵대응 신규사업 미반영 내역

사업명	방위사업청 요구안	윤석열정부안
F-X 2차 사업	200억	-
UH/HH-60 성능개량 사업	309.03억	-
F-15K 성능개량 사업	11.67억	-
철매-2 성능개량 2차 사업	714.19억	-
전술지대지유도무기-2 (R&D) 사업	200.29억	-
장거리함대공유도탄(SM-6급) 사업	8.5억	-
230mm급 다련장 사업 (3차 양산사업 누락)	2,155.45억	416.63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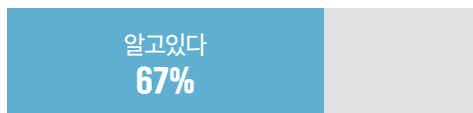
자료 : 방위사업청

# MB 답습 無대책, 담대하지 않은 '담대한 구상' 無원칙 위험한 발상, 無해법 공허한 허상

- 윤석열정부 '담대한 구상', MB정부 '비핵·개방·3000' 아류작
  -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둘 다 설계, 실패한 대북정책 재탕
- 先비핵화 고수,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대북 불신의 구상
  - 대북 '제안'이 아닌 윤석열정부의 '결심' 또는 '다짐' 수준, **대북정책 단절선언**이자 국내정치용 말잔치에 불과
  - 전제 위한 노력 없는 '담대한 구상'은 무용지물, 반드시 실패
- 남북간 합의 파기 언급, 역대정부가 추구한 북핵해법 이탈
  - 남북 합의는 특정 정당의 것 아닌 대한민국 정부가 맺은 결실, 파기 언급 자체가 어불성설 (윤석열 대통령, 이종섭 국방장관 등)
- 윤석열정부의 '힘에 의한 평화'는 전쟁을 상수로 한 **가짜 평화**
  -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전쟁 없는 평화' vs 윤석열정부가 원하는 것은 **'평화 없는 전쟁'**
  - 군사압박에만 매몰, 한반도 강대강 가속화로 전쟁 가능성만 높아진 현실

## 윤석열정부 '담대한 구상'에 대한 국민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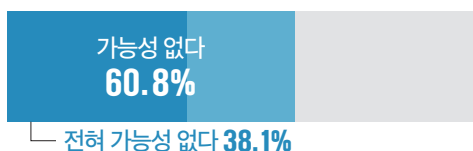
윤석열정부의 '담대한 구상'



윤석열정부의 목표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을 단념시키고 대화 복귀를 유도하겠다”



'담대한 구상'에서 제시한  
“비핵화 단계별 우리의 조치 동시 이행”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윤석열정부의 대응



자료 : 조원씨앤아이, 2022.10월